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방향』

| 01

1.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 평가: COVID-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와 세계무역 치명적 피해 발생
2.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3.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세워야

- 용어 해설

- ▣ 2021년 세계 주요 정치·경제 일정

| 14

- ▣ 2020년 하반기 주요 통상 일지

| 15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 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 평가: COVID-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와 세계무역 치명적 피해 발생

- COVID-19 확산으로 세계경제 침체 속 세계무역 격감
-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 메가-FTA 출범, 의미 있는 진전

COVID-19 확산으로 세계경제 침체 속 세계무역 격감

2020년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 사태는 세계경제와 무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팬데믹 초기에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와 지역이 봉쇄되면서 경제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세계무역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4분기 말과 2/4분기 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박업, 요식업, 항공, 관광, 교육, 건설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생산이 70~80% 감소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사태가 다소 안정되었던 3/4분기부터는 세계경제와 무역의 회복세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4/4분기에 들어와 COVID-19이 다시 대유행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회복세가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치료제 개발 역시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4.2%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3.7%, 일본 -5.3%, 유럽 -7.5%로 선진국 중에서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도국 중에서는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9.9%, -6.0%를 기록하여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1.8%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G20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고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20년 세계 상품무역이 9.2% 감소한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20년 2/4분기 초에 전망했던 -12.9%보다는 나아진 것이며 이는 3/4분기 이후 COVID-19 팬데믹 사태가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확실한 통계가 잡히지 않지만 세계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은



박태호 원장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

약력보기 ▶



최석영 고문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약력보기 ▶



임채민 고문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약력보기 ▶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분기에는 1/4분기와 비교해서 23% 감소했고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FC) 시기와 비교해도 훨씬 큰 폭의 감소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과 수입이 2020년 각각 -4.5%, -4.4% 성장을 기록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감소하였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2020년 1월 말 미국과 중국 간에 제1단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2월 들어서면서 COVID-19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은 그 원인이 전적으로 중국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중 갈등은 다시 고조되었다. 이미 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지속하는 것 외에도 화웨이 제조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사용 금지,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관련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미국 승인 요구, 미국 연기금의 중국기업 투자 제한, 미국 거래소에 상장한 중국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회계기준 준수 및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증명 의무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및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문제 제기, 중국 언론기관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고조시켰다.

중국도 미국에 대응했다. 제1단계 합의에 포함된 미국 상품, 특히 농산물과 비행기 등의 구입 중단 위협, 중국이 보유한 미국 채권 매도 검토, 애플, 퀄컴, 시스코 등 미국 IT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이버 보안조치 강화 및 중국의 독점금지법 적용 검토, 최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2025년까지 1조 4,00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등으로 대응했다. 이렇듯 2020년 미-중 갈등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제2단계 합의 등 상호 화해를 위한 노력 역시도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EU와도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 분야에서 통상 갈등을 보여왔다. 가뜰이나 미-중 통상 갈등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인 글로벌 통상환경이 미국과 EU 사이의 통상분쟁으로 한층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브렉시트(Brexit) 협상이 연말에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감소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COVID-19 사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기창 외국변호사

T. 02-772-5904
E. kichang.chung@leeko.com

약력보기 ▶



조영재 외국변호사

T. 02-772-4908
E. youngjae.cho@leeko.com

약력보기 ▶



주현수 변호사

T. 02-6386-6363
E. hyunsoo.joo@leeko.com

약력보기 ▶



진성백 회계사

T. 02-2191-3236
E. sungbaek.jin@leeko.com

약력보기 ▶

메가-FTA 출범, 의미 있는 진전

글로벌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나 WTO는 2001년 출범한 도하라운드(DDA) 협상의 반복되는 실패로 그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다. 최근에는 분쟁 해결을 위한 상소기구가 마비되고 신임 사무총장 선임마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에 의하면 WTO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자무역체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64개 회원국들의 합의가 요구되는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 등으로 인해 WTO 개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VID-19 사태, 미-중 통상분쟁, 다자무역체제 약화 등으로 무역자유화와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USMCA, RCEP 등 메가-FTA가 출범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미 2019년 이행이 시작된 CPTPP와 2020년 7월 발효된 USMCA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통상규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20년 11월 최종 타결된 RCEP은 무역자유화 수준이나 신통상규범 반영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 내 통합 원산지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러한 메가-FTA는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다자무역규범 제정에도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웅 회계사

T. 02-772-4932

E. woong.choi@leeko.com

약력보기 ▶



허난이 연구위원

T. 02-6386-6451

E. nyhur@leeko.com

약력보기 ▶



박정준 연구위원

T. 02-772-4806

E. jeongjoon.park@leeko.com

약력보기 ▶

2. 2021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 회복 기대 속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 모멘텀 후퇴
- 바이든 통상 정책 궁극적으로 자국 제조업 부활과 대중국 압박에 집중
- EU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 노력 시도
- WTO 개혁과 메가-FTA 추진 동시 진행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의약품·의료기기 국제무역 중요성 증가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 회복 예측되나 COVID-19 안정화 여부가 관건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들은 2021년 세계경제와 세계무역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IMF는 2021년엔 세계경제가 5.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COVID-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COVID-19 재확산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제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1년 1월 초 발표한 전망치에 의하면 세계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특히 미국(3.5%), 유럽(3.6%), 중국(7.9%) 등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COVID-19 확산세가 안정되지 않고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세계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도 세계은행과 비슷하게 202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4.2%로 예측하면서도 백신이 성공적으로 보급되어 COVID-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자신감이 제고되고 불확실성 해소가 동반될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WTO는 2021년 세계무역은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7.2% 성장을 기대했다. 물론 서비스무역이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될 경우 세계무역성장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결론적으로 2021년 세계경제와 세계무역 성장 전망은 COVID-19 재확산세 추세와 백신공급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 모멘텀은 당분간 정체 내지 후퇴 우려

미-중간 통상 갈등 확대로 글로벌공급사슬(GSCs)에 분절화되고 COVID-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경제 개입, 외국인 투자 규제 및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면서 위축되었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이 정체되어왔다. 금년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상 어젠다도 환경, 노동, 인권 분야와 연계되어 오히려 무역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미국이 제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미-중 양국 간 생산, 투자, 무역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탈동조화(decoupling)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범에 따른 통상질서 회복을 강조하고 WTO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중 대립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은 당분간 정체 내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통상 정책,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과 노동자 보호에 역점

바이든 행정부의 당면 과제는 COVID-19 팬데믹 극복과 침체된 미국 경제 회복에 있다. COVID-19으로 위축된 산업기반과 재정확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신행정은 양극화 확대, 기본 인프라 부족, 연구 및 기술 개발 투자 부족, 숙련공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조항 활용과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 강화 및 기업유턴(리쇼어링)에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라 국제규범을 중시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불공정 무역을 시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가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위해 원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글로벌세이프가드를 규정한 통상법 201조와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했던 통상법 301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시행할 것이다. 다만 기존에 부과된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재가입하고 미국의 노동자가 외국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탄소국경세 도입을 선언했다. 또한 노동규정을 강화한 USMCA의 노동분쟁해결절차

(RRLM)를 향후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협정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WTO 등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트럼프가 마비시킨 WTO의 분쟁해결체제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은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 무역협상권한(TPA)이 2021년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신규 TPA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동 권한의 확보 여부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무역 압박조치는 최대한 자제하고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존중과 개혁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상당 수준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행정부 역시 중국의 불공정무역조치 및 첨단 기술 분야 정부 개입에 강한 압박

바이든은 국가 안보와 통상의 연계, 수출 통제 강화와 더불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경 대응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의원과 부통령 재직 때부터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 강제 기술이전, 중국공산당의 시장 지배 강화, 산업보조금과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등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나, 바이든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대중 정책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10월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5중전회)는 소위 '쌍순환(dual circulation economy)' 정책을 도입하여 내수확장, 대외 개방과 규범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정치에서 위축된 입지를 보였던 시진핑의 대외 신임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적으로 경제침체를 회복하고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변화, COVID-19 대응, WTO 개혁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미-중이 불가피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2021년 미-중 관계는 근본적인 경쟁구도 하에서 제한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 노력 시도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영역에서 EU와 갈등을 겪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보복관세와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에 대해 미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했고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미국과 EU는 대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과거 다자 간 무역체제에서 보여주었던 미-EU 간 공동보조가 실종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여 미-EU 간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2020년 12월 초 EU는 '글로벌 변화에 대한 EU-미국 어젠다(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훼손시킨 범대서양 파트너십을 복원하기 위해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맞추어 EU-미국 간 전략적 공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 선언은 양측의 전략적 공동 가치 추구가 글로벌 협력의 근간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우선 협력 대상 분야로서 COVID-19 분야, 기후변화 등 환경분야, 기술, 무역, 표준 분야 및 민주주의 확산 등을 제의했다.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EU가 먼저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 규범과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문제, WTO 개혁, 디지털 무역협정 등 무역규범뿐 아니라 COVID-19 대응, 기후변화, 환경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체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 환경 및 노동 규범 분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가 중국과 먼저 투자 규범에 합의한 것은 미국에 대한 유인과 동시에 견제로 볼 수 있고,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소지도 있다.

미국은 메가-FTA, 분야별 협정 등의 대안 검토와 함께 WTO 개혁 주도적 참여 전망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자신의 주도로 체결된 TPP를 탈퇴했고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21개 미국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후 CPTPP를 체결했다. 한편 ASEAN+6로 구성된 RCEP 협정이 작년 11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타결됐다. RCEP은 자유화 수준이 낮고 상품 분야에 치중된 협정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분야별 관세 인하와 원산지 규정 등의 합의를 통해 미국을 제외된 공급 사슬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협정 체결을 후순위에 두면서도 중국 주도로 아태 지역의 통상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선택지는 CPTPP 가입 또는 개정 교섭, TPP 복귀 그리고 분야별 협정 또는 복수국 간 협정 체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첫 세 개의 옵션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USMCA 수준의 의무를 요구할 경우 CPTPP

회원국들이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무역, 의료기자재 및 기후변화 등 특정 분야별 협정이나 복수국 간 협정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미 RCEP에 참여하고 있지만 메가-FTA의 다른 한 축인 CPTPP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CPTPP 가입에 대한 의사를 보이게 된다면 미-중 갈등 속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다. WTO가 장기 표류하는 상황에서 메가-FTA가 규범과 시장 개방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당분간은 메가-FTA에 대한 주요국의 관심과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WTO의 3대 축인 행정, 입법과 사법 기능 모두가 약화됐다. 회원국의 통상 정책을 감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기존의 DDA 협상은 물론 서비스 무역,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글로벌 가치사슬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상소기구도 제 기능을 못 하게 되었고 신임 WTO 사무총장 선임도 연기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훼손하고 WTO 상소기구를 마비시킨 것을 비판하고 규범에 입각한 다자주의의 회복을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분쟁해결제도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업보조금,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규범을 입안하는 입법 기능 강화 및 투명성 확보 등 WTO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그간 미결 현안으로 있는 WTO 신임 사무총장 선임이 완료되면, WTO의 리더십 공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상황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작년에 개최되지 못한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2021년 개최되고, 미국의

리더십과 함께 산업보조금 등에 대해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간 미국의 반대로 선임되지 못했던 상소기구 위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협조와 지지에 힘입어 선출될 수 있다면 새해 WTO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COVID-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국제무역의 중요성 증가

급속한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4차 산업혁명은 2020년 팬데믹의 확산에도 더욱 발전되었다. 2020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4차 산업혁명 지표'를 살펴보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8년도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확대될 공공데이터의 개방 건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이 관련 플랫폼 발전의 필요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뿐 아니라 드론,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공장 등의 기술들 또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추세이다. COVID-19을 겪으면서 특히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증하였다. 즉 COVID-19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각 국가들 또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여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COVID-19으로 인해 변화된 경제활동 구조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꼭 필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1년에도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등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이 촉진되고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등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80여 개 이상 국가들이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상품생산이 확대되고 글로벌 방역 공조의 필요성 등이 확산되면서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되었고 의약품·의료기기의 국제무역이 활성화되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필수 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입규제 및 국내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COVID-19 관련 제품의 내수 공급 역량 활성화에 주력해 왔고, 2020년 11월에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의 양허대상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외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021년에는 백신의 개발 및 공급을 둘러싸고 남남갈등 및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백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비의 환수와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팬데믹 시국에서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로써 개도국에 '적정한(affordable)'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G20, WTO 및 APEC 등을 중심으로 팬데믹 종식을 위한 글로벌 방역 공조와 의약품·의료기기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다자간 합의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전략 세워야

- COVID-19 팬데믹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 변화에 대비
- 바이든 신행정부의 경제 및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미국, 중국, EU 등 G3 상호 간 통상관계 전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 WTO 개혁과 새로운 메가-FTA 추진에 전략적 대비
-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의약품·의료기기 국제무역 추세에 대응

COVID-19 팬데믹 시나리오별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 변화에 대비

① 2021년 세계경제와 세계무역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대응책 마련

- 2021년 세계경제 및 세계무역 상황은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이에 따른 COVID-19 팬데믹 안정화 여부에 달림
- 따라서 세계경제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경우를 기본 시나리오로 잡고 그보다 못할 경우와 더 좋을 경우 등으로 나누어 시나리오 별로 향후 투자 및 사업 운영계획 필요
- 경영상 어려움 및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 탄력적 노사관계 등 산업 기반 유지 대책을 마련하고 인수합병 및 전문화 등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

② COVID-19 팬데믹, 미-중 분쟁 격화 등으로 야기된 탈동조화 현상에 대응

- 탈동조화 현상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기업별로 탈동조화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필요
-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중국의 임금 상승, 미국의 대중 압박 조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 우리 기업들은 가공무역을 위한 동남아 및 인도 등으로의 생산지역 이전도 적극 고려 필요
- 중국 중심의 GVCs, RSCs 등 수정 및 재구성해야 함. 예를 들어 국내로 리쇼어링 추진, 가치사슬 단계 단축, China+1지역 체제 구축 등 대안을 마련
- 고기술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와 더불어 국내 생산 기능 확대를 위한 스마트 제조 혁신 도모

바이든 신행정부 경제 및 통상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할 미국 우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비

-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강화 대비: 미국 내 직접투자 고려
-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확산에 대비: 코로나 사태 안정 후 대미 수출 증가율 관리 필요
-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보호 강화에 대비: 미국 기업과의 M&A 철저한 대비, 첨단 기술협력 파트너 다변화

②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에 대응하여 경영 전략 재구축

- 환경분야 규제 강화 대비: 미국의 탄소조정세 도입 관련 논의 검토 및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친환경 분야 인프라 투자 확대 대비: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려 정책에 따라 확대될 수소 및 전기차, 태양광 산업의 공동연구개발 추진 및 미국 내 프로젝트 참여
- 노동분야 규제 강화 대비: 미국 내 노조가 강한 산업분야에서의 보호무역조치 강화에 대비, USMCA를 포함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노동권 강화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논의 검토
- USMCA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출을 위한 대응책 마련

미국, 중국, EU 등 G3 상호간 통상관계 전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① 2021년에도 지속될 경쟁적인 미-중 통상관계에 대응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

- 미-중 통상분쟁 확대에 대비: 중국 내 가공무역 통한 대미 수출 전략 수정, 중국의 대미 수입품 대체, 미국의 대중 수입품 대체 방안 모색
- 미국이 지속할 중국 견제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으로 GVCs, RSCs 등 수정 및 재구성, 미국 내 직접투자 고려
- 미-중 통상분쟁 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원화 강세 및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율 모니터링 체제 구축
- 중국의 쌍순환 정책 중 내수시장 확대 활용: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확대, 제3지역에서 대중국 수출 확대

② 2021년 사안별 공조와 대립을 지속할 미-EU 통상관계에 대비

- 철강과 관련하여 미국의 232조 조치와 EU의 글로벌세이프가드의 지속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수출 다변화 등 우리 철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DST 도입과 관련한 EU에서의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가 미칠 영향을 분석
- 미-EU 간 무역규범 및 COVID-19 대응, 기후변화, 환경 및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해 변화될 국제통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WTO 개혁과 새로운 메가-FTA 추진에 전략적 대비

① WTO 개혁과 신통상규범 제정 논의를 면밀하게 모니터

-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WTO 개혁과 신통상규범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
- 분쟁해결제도 정상화와 산업보조금, 디지털 무역 등 WTO 개혁과 새로운 규범 제정 논의에 우리 기업들의 의견 제시
- 현재 진행 중인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중재 등 다른 분쟁 해결 수단의 효과를 함께 검토
- 정부는 보조금 관련 새로운 규범 제정에 대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업 및 농업 보조금의 해당 WTO 규정 합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업계에도 전달

② CPTPP, USMCA, RCEP과 같은 메가-FTA 확산 추세에 대응

- 기존 메가-FTA에 도입되어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메가-FTA에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에 대비: 환경 및 노동, 국영기업, 보조금,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원산지규정 등
- 각 FTA별 통합 원산지규정 활용에 대한 RSCs 구축 및 지역 판매 전략 수립 필요
- CPTPP(또는 TPP)에 미국이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우리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전략적 입장을 수립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의약품·의료기기 국제무역 확대에 대응체제 강화

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IT 인프라 확대

-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에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IT 관련 플랫폼 및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 IT 인프라 확대
- 빅데이터와 AI 활용의 급증에 따른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 간 소통 필요
- 4차 산업혁명 혁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클라우드 컴퓨팅, 5G 및 6G 네트워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

-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 데이터 소유 및 지식재산권 규제 정책에 대한 민관 합동 논의 필요

② COVID-19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국제무역 추세에 대비

- COVID-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각국의 국가주의적 의약품·의료기기 수급 제한 조치에 대비하고 자체 공급 역량 강화
- 백신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
- G20, WTO 및 APEC 등에서의 글로벌 방역 공조와 의약품·의료기기의 무역원활화 논의에 적극 동참

▪ 용어 해설























1.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2.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3.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4.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5.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어젠다)
6. DST: Digital Services Tax (디지털 서비스세)
7. GFC: Global Financial Crisis (세계금융위기)
8.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협정)
9. GSCs: Global Supply Chains (글로벌 공급사슬)
10. GVCs: Global Value Chains (글로벌 가치사슬)
11.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12. MC: Ministerial Conference (각료회의)
13.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14.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 RRLM: 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
16. RSCs: Regional Supply Chains (지역공급사슬)
17. 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협상촉진권한)
18.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9.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20.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 2021년 세계 주요 정치·경제 일정



□ 2020년 하반기 주요 통상 일지

날짜	내용
7.1	 USMCA 발효
7.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1차 공식협상  한국, 캄보디아와 FTA 협상 개시 선언
7.20-23	 한국, 중국과 제8차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7.29	 WTO, 일본의 對한국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 패널 설치
7.30-31	 한국, 캄보디아와 제1차 FTA 협상 개최
7.31	 한국, 우즈베키스탄과 FTA 공청회 개최
8.1	 EU-베트남 FTA 발효  한국, 중국과 제24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중국 칭다오)
8.3	 한국, 중국과 제3차 FTA 공동위원회 개최
8.25-26	 한국,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8.29	 한국, 아세안과 제17차 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
8.31-9.3	 한국, 캄보디아와 제2차 FTA 협상 개최
9.7-16	 WTO, 사무총장 선출 1라운드
9.15	 중국, WTO 미-중 301조 분쟁에서 1심 승소  중국, 미국산 농약, 윤활유 등 16개 품목 추가관세 면제 연장
9.24-10.6	 WTO, 사무총장 선출 2라운드
10.6	 한국, 캄보디아와 제3차 FTA 협상 개최
10.23	 영국, 일본과 CEPA 정식 서명
10.26-29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 개최
10.27-30	 한국, 중국과 제9차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11.3	 미국, 대통령 선거

날짜	내용
11.6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 연기
11.15	 RCEP, 최종 서명
11.16	 APEC 제31차 합동각료회의
11.17-19	 한국, 칠레와 제4차 FTA 개선협상 개최
11.18-20	 한국, 캄보디아와 제4차 FTA 협상 개최
11.20	 APEC 정상회의
11.21-22	 G20 정상회의
12.1	 중국, 수출통제법 발효
12.15	 RCEP, 제1차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
12.16	 호주, 중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 WTO에 제소
12.18	 한국, 인도네시아와 CEPA 최종 서명
12.24	 영국, EU와 미래관계 협상 합의
12.30	 EU, 중국과 투자협정(EU-China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CAI)) 체결 합의
12.31	 영국, EU 탈퇴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RCEP 서명의 의미와 시사점	강문성 교수(고려대학교)	2020.12
2	[Special Issue Brief] 바이든 당선자의 통상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브뤼셀의 시각 • Trade Polic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of the US and the Implications to the Korea-US Trade Relations • Biding Time for Biden's New Trade Agenda	Joel D. Kaufman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이호석 박사(ECIPE)	
3	The Reshuffle of GVCs in the Era of US-China Decoupling and COVID-19	Sébastien Miroudot 박사 (OECD)	2020.10
4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Global Value Chain 현황과 변화 전망	이항구 연구위원 (한국자동차연구원)	
5	USMCA 발효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강준하(홍익대학교)	2020.7
6	포스트 COVID-19 시대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제도	안유화(중국증권행정연구원)	
7	[Special Issue Brief] The USMCA: An Introduction to the Rules of Origin for 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R.O. Cunningham 변호사 G.S. McCue 변호사 Z. Simmons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2020.3
8	Brexit: The imminent crisis in the EU-UK trade negotiat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9	우리나라 기업지원프로그램의 보조금 특정성 사례분석 및 시사점	조영재 변호사(광장)	2020.1
10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11	[Special Issue Brief] 미-중 경제 · 무역협정: 주요 내용 및 분석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2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3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학교)	2019.7
4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5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 (OECD)	2019.7
6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7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8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2019.5
9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10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와세다대학교)	
11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2019.1
12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2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3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4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5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6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